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23년 5월 1일 (월)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9길 14-1 거산빌딩 3층 | 02-778-4001~2 | www.pssp.org | pssp4001@gmail.com | 후원 기업은행 057-034981-04-017 사회진보연대

진보정당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정치방침은 실패한다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의 문제점

4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양경수 위원장이 제출한 선거연합정당안을 토론했다. 이 안은 민주노총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폭력사태로 파국을 맞은 역사를 외면하고, '통합'만 강조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성찰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분당의 원인, 패권주의와 북한에 대한 편향적 인식

민주노동당 분당의 결정적 원인은 당내 자주파의 패권주의였다. 자주파는 지구당위원장 선거를 비롯한 각종 당직·공직을 장악하려 위장전입, 당비 대납, 집단 주소 이전와 같이 상식을 초월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당내 선거규정을 개정해 다수파에게 유리한 1인 다표제를 도입하여 주요 당직을 차지했다.

자주파의 편향적 대북 인식은 분당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 2006년, 자주파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하는 결의문 채택을 무산시켰다. 중앙 당직자가 남한 정치 동향 및 민주노동당 내부 성원의 인적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북한에 보낸 '일심회 사건'까지 터지며 갈등이 심화했다. 17대 대선 참패 뒤 꾸려진 비대위는 당내 갈등을 해소하려는 혁신안을 제출했지만, 자주파가 이를 거부하여 분열의 길을 걸었다.

폭력사태로 얼룩진 진보대통합

2012년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를 통해, 민주노동당 분당의 역사를 망각한 '진보대통합'의 결말을 확인할 수 있다. 분열의 씨앗은 2011년 민주노동당(잔류파),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이 합당하여 통합진보당을 결성한 것 자체에 있었다. 이념 차이를 무시한 채,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 대상으로 삼았으니 당내 노선갈등이 불가피했다.

민주노동당 내 갈등을 초래했던 자주파 내 당권파는 반성 없이 패권주의를 재연했다. 2012년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투표에서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조작한 대리투표와 이중투표가 확인됐다. 이에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안을 표결에 부치자, 이를 거부한 당원들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단상을 점거하고 회의를 진행하던 공동대표단을 폭행했다.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 철회

통합진보당 결성과 분열은 민주노총에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12년 김영훈 집행부가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와 민주통합당(민주당의 전신)과의 선거연합을 총선방침으로 통과시켰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하는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진보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여론이 상당했음에도 총선방침 통과를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논란과 폭력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주노총 총선방침에 성토가 쏟아지자, 결국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를 철회했다.

선거연합정당 추진, 역사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

민주노총이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려면 진보정당 분열의 역사가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민주노동당 분당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는 패권주의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선거연합정당은 어떻게 다수파의 패권주의를 제어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둘째, 민주노동당 자주파는 북한 핵무장을 자위용으로 인정하고, 북한 인권문제와 세습 문제에 침묵하여 당내 갈등을 초래했다. 현재 북한은 선제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남한을 향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연합정당은 국제정세와 북한 핵위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

'노동중심 진보 정치'는 민주노총 혁신에서 출발해야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중심 진보대연합 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민주노총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그러나 선거연합정당 건설로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지탄받는 민주노총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로 추락한 진보정당의 위상도 복구되지 않는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파국으로 치달은 진보정당 역사를 성찰하고 민주노총을 혁신하는 것이다.

혁신의 첫걸음, 노동자 격차축소

노동 양극화가 심해지자 민주노총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오명을 썼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공기업은 외주화로 하청업체를 쥐어짰고, 이것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지체로 이어졌으나 노조가 제어하지 못했다. 또한 노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서비스·자영업 저임금노동자가 확대되었지만,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을 지속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기업별 노사관계 극복과 노동자 격차축소를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임금 격차를 조율할 수 있는 초기업적 교섭구조를 마련하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감축하는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국제정세와 북한 핵무기에 관한 입장

국제정세에 관한 입장도 민주노총 혁신의 주요 과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과 무력통일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를 체제보장의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해 중·러와 밀착하면서 군사행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안적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며 두둔하고, 북핵을 용인하자는 주장도 상당하다. 민주노총이 팽창주의와 북핵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건설에 앞장서야 하므로, 앞으로 본격적인 국제정세 토론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반보수연합으로부터 벗어나야

'노동중심 진보정당'을 내세우면서,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 점도 혁신대상이다. 단적으로 민주노총 후보로 전주을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고맙습니다 민주당'현수막을 걸어 물의를 일으켰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반대 시위도 벌여 '친이재명계 민주당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다. 민주노총 조합원 상당수가 선거가 되면 민주당을 찍는다. 그런데 민주노총 후보가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은 실패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반보수 연합에서 벗어나야 한다. ●

계간 사회진보연대

마르크스주의의 시각에서 정세와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합니다.
현 정세를 돌파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입장과 과제, 방향과 정책에 대해 연구합니다.
사회운동 · 노동조합의 교육 · 토론에 활용할 교육자료를 정선하여 전달합니다.

기관지 정기구독 안내

≪계간 사회진보연대≫는 1년에 4회 발행됩니다.
(3· 6· 9· 12월)

01. CMS 정기출금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www.pssp.org)에서 구독 신청
신청 이후 첫 발행월부터 3개월 마다 15,000원씩 출금

02. 무통장 입금

전화 (02-778-4001) / **이메일** (pssp4001@gmail.com) 로 신청 후 구독료 송금

구독료:

1년 (60,000원), 2년 (110,000원), 3년 (150,000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 208-155464-04-026 사회진보연대**

웹소식지
〈사회운동포커스〉
pssp.org

사회운동웹진, <사회운동포커스>

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이 주목해야 할 정세, 운동전략, 국제 이슈, 투쟁현장 소식을 전달합니다.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ocialmovementfocus
텔레그램 | t.me/socialmovementfocus

▶ 오른쪽 QR 코드 스캔으로 텔레그램 채널 구독!